

第254回國會 (臨時會) **일자리創出을위한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6月29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안흥준 위원

(노동부)

◆대학구조개혁,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측면·공급측면·인프라측면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입학정원 감축·대학 학과 및 학과 내 교육과정 조정 등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 대학입학정원 9만 5000명을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 비입학자들에게 또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대체할 교육과정들이 수준 높은 인력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실업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취업률이 높은 소위 인기학과 위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점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들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재정지원에만 몰두함으로써 본질적인 구조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정의 소수학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당장은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장

기적으로는 학문분야 간 불평등·집중육성 학문분야 전공자의 공급과잉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점 또한 단기적인 실업률 해소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인 대학구조개혁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대졸자수 증가 및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대학별·학과별로 취업률을 공표하고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전적 실업의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 대학들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경우 당연히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응시생들이 몰릴 것이고 소위 대학별·학과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취업지원실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욕구를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보다 효과적인 실업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학 취업지원실 지원사업'을 청년실업종합대책사업에 정식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D·3S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 해소대책 및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관련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선호현상 및 3D·3S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등에 공익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소위 미스매치(mis-match)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사실 실업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나,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보여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배포한 노동부의 시정·조치계획에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 선호현상과 3D·3S업종 기피현상에 대해 노동부는 어떠한 기조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물췌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수지원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외식업체의 ‘홀서빙 요원’ 360명에게 무려 3억 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노동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직장연수 대상에서 이 업종을 제외하겠다고는 했지만, 만일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단순노무직종이 대상직종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확인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사업의 경우, 연수수료생들은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하거나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대학이 채용이나 학점이수과정에서 이 연수인증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기업이나 대학이 연수인증서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나 충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시도에 그치는 사업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단지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원하는 수준으로 체험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기업이나 대학도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노동부장관 김대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이재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노동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예산(2005년)

○아래 표 참조

(단위 : 억 원)

사업명	예산
합 계	4,22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625
구인업체 개척사업	56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107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439
정부위탁훈련	831
취업 유망분야 훈련	428
고용안정센터 육성	72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26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30
중장기인력수급전망모델구축	21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10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37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2
구인구직채용박람회	6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23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4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7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97
교대제전환지원금	11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787
뉴패러다임 확산	20

노동부 소관 직업관·직업의식 관련 예산
(2005년)

○아래 표 참조

(단위 : 억 원)

사업명	예산
합계	661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625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26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10

※사업별 개요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직장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지원제”와 산업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제”로 구성·운영 중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 청년층에 대한 직업 정보 개발·보급, 대학 취업담당자 교육, 고용정보 메일링 서비스,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Job school), 취업지원용 영상매체 제작 등 포함

•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정립 및 직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 체험관 설립 비용(2010년 완공 예정)

(오제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년(15~29세) 실업률·취업률·구직단념자 등 분석

○아래 표 참조

(단위 : 천 명, %)

	'04.5	'04.12	'05.1	'05.2	'05.3	'05.4	'05.5
생산가능인구	10,162	10,043	10,019	9,999	9,974	9,949	9,927
취업자	4,598	4,534	4,544	4,514	4,464	4,458	4,499
실업자	385	420	431	425	413	375	345
경제활동인구	4,983	4,954	4,975	4,939	4,877	4,833	4,844
비경제 활동인구	5,179	5,089	5,044	5,060	5,098	5,116	5,081
구직단념자	24	41	42	37	32	28	30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49.0	49.3	49.7	49.4	48.9	48.6	48.8
취업률 (취업자/경제활동인구)	92.3	91.5	91.3	91.4	91.5	92.2	92.9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	7.7	8.5	8.7	8.6	8.5	7.8	7.1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	45.2	45.1	45.4	45.1	44.8	44.8	45.3

※상기 표는 15~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안홍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구직자의 관측은 일자리 선호현상과 3D업종 기회현상에 대해 어떤 기조로 접근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심.

○정부에서도 청년층이 관측은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 청년층의 직장체험,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교사·학부모 등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직업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위한 지원금 및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적극적 취업알선, 작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연수지원제에 단순노무직종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심.

○연수지원제 대상 업무 중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직종은 지원제외 업종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홀씨빙 업무는 지원제외 직종으로 예시하지 않아 일부지방관서에서 연수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수업무의 성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만 명의 연수현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여 7. 1. 지침개정을 통하여 단순홀씨빙 업무를 연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향후 지침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심사단계에서 단순 노무직종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음.

현재 기업이나 대학이 연수 인증서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심.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의한 현장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이 04년의 경우 85개에 이르는 등 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의 현장 연수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연수인증서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청소년직장체험이 단기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심화시키고,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심.

○기업 측의 연수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직장체험 내실화를 위해 대학과 현장과의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대학과 기업 측이 자체적으로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학생 연수를 요청할 경우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훈련 비용 지원으로 효과적인 직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직장체험 청소년에 대한 대학과 기업 측의 혜택부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참가 대학이나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학 측에는 산학협력실적, 직장체험참가인원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실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06년 대학취업지원실 지원예산(안) 110억 원

-연수처를 제공하는 기업 측에는 연수생 활용 규모에 따라 50만 원~800만 원까지의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참가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대학 구조개혁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 등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실업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심.

○정부는 04년 “청년실업원인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랜 취업소요기간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일시적 실업해소를 위한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청년고용촉진대책은 주로 노동시장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고 청년층의 직업관·직업의식 확립을 위한 진로직업지도 및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재학생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산업수요의 대학 교육 반영, 계약학과 제도 등의 산학협력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업의 악순환을 단절, 청년고용이 지속적으로 촉진·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본질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 물으심.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단순히 정원감축, 학부/학과/단과대학/대학 간 통합이 목적이 아닌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구추계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적령인구의 입학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원감축 등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백화점식 종합대학으로 동일 분야에 인력을 과잉배출하고 있고,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사회수요가 감축된 분야의 구조조정은 대학경쟁력 강화의 필요조건임.

○아울러 대학 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등 기초학문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술연구 조성비 확충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본 답변은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송부 받은 것임.

정부에서 대학별·학과별로 취업률을 공표하고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할 경우, 대학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심.

○고졸자의 대부분(04년 81.3%)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노동시장의 주된 공급자이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정부는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하여 대학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먼저,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기능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바, 재학생의 취업촉진을 위해 노력한 대학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 및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대학과 학과의 취업률을 공표하고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이와 같이 대학 스스로 취업을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비롯한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학 취업지원실 지원사업’을 청년실업종합대책에 정식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심.

○정부에서도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확충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06년부터 신규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06년 예산(안)에 110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06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